

 금융감독원  금융보안원	보 도 자 료	 서울특별시  서울경찰청
--	----------------	--

보도	2024.1.29(월) 조간	배포	2024.1.26.(금)
담당부서	금융감독원	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 팀장 류영호 02-3145-8288
		대부업감독팀	담당자 선임 변나혜 02-3145-8261
		IT검사국	책임자 팀장 유희준 02-3145-7415
		검사기획팀	담당자 수석 김상록 02-3145-7423
	서울시	서울시청 파견	담당자 수석 차정은 02-2133-9550
		노동공정상생정책관	책임자 과장 김경미 02-2133-5360
		공정경제담당관	담당자 팀장 박상진 02-2133-5374
	서울경찰청	수사과	책임자 과장 김경규 02-700-3712
			담당자 담당 임혜성 02-700-3648
	금융보안원	침해대응부	책임자 팀장 유정각 02-3495-9410
		침해대응기획팀	담당자 수석 김규연 02-3495-9412

금융감독원·서울시·서울경찰청·금융보안원,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

<p>〈 주요 내용 〉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총 5개사에 대해 1.29일부터 점검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 개인정보 판매·유출,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, 허위·과장광고 등 집중 단속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·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예정</p>
--

<p>대부업 이용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.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가족·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나 주소록·사진파일·앱설치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!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고금리,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!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삭제 등 요청*하세요! *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(☎02-735-8994)를 통해 신청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불법추심 피해발생(우려)시 금감원·경찰에 신고하세요!</p>

I . 점검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 일원으로서 지자체, 경찰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습니다.

* 대부업자(대부중개업 포함)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 ① 대형 대부업자(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)는 금융위·금감원, ②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 ('23.6말 기준 총 8,771개 중 금융위 등록 963개(10.9%), 지자체 등록 7,808개(89.1%))

** '23.5월 금융감독원은 경기도청·경찰청·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 소재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, 불법 개인정보판매, 불법 사금융 광고 등 적발(경찰 수사의뢰)

<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 행위 피해 사례 >

- #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1주일 후 2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,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 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.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하여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.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,214%로 법정 최고금리(20%)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.
- # B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(약 20만명 추정)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(미등록 대부업자)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였다.

-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,
 - 금융감독원·서울시·서울경찰청·금융보안원은 '24.1.29(월)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 -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·유출,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, 정부·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·과장광고,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.

[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계획(안)]

- (점검대상)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총 5개사
 - (점검반원) 금융감독원, 서울시(자치구), 서울경찰청, 금융보안원
 - (점검내용) 개인정보 유출,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, 허위·과장광고 등
- ※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,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예정

※ 이번 합동점검은 '23.11월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대부중개플랫폼 관계 기관 회의* 및 12월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**에서 집중 논의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 기관간 공조 강화 방안의 일환입니다.

*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서울시, 경기도, 인천시, 성남시, 대부금융협회

** 서울시, 금융감독원, 서울경찰청, 서울지방국세청,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

II. 주요 점검 항목

-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 및 무단 유출,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, 허위·과장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,
-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(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) 및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(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)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하겠습니다.

< 중점 점검사항 >

①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

- ☑ 개인정보 무단 유출 여부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절차 준수 여부, 개인정보 파기 여부 등

② 광고의 적정성

- ☑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 게시, 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기재 여부 등

③ 허위·과장광고 여부

- ☑ 정부·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,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(예: 햇살론),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

Ⅲ. 향후 계획

-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,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,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.
- 금융감독원은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,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

- ①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며,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, 불법추심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- ② 대부업체에서 가족·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 주시며,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·지자체에 신고*하여 주시고, 법정 최고금리 위반, 불법 추심 등 불법 행위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,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·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.

*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: ☎1332 → 3번,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: 해당 지자체('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' → '담당자 연락처'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